

광주 4년째 교통사고 1위 불명예

‘교통 문란’ 바로잡자



① 프로그램

‘민주·인권·평화’의 성지인 광주가 문란한 교통질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나 4년째 ‘교통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썼다.

전문가들은 광주의 불명예스런 ‘1위 행진’의 주된 원인으로 시민들의 낮은 질서의식을 꼽고 있다. 광주가 ‘교통 지역’의 명예를 빼앗아 면지기 위해선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올해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내적인 질서의식 개선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의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최근 출범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통사고율 ‘제로’에 도전하기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38명이 사망하고, 1만3천533명이 크게 작은 부상을 당했다. 하루 평균 22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37명이 다치고, 사흘에 한 명 가량은 목숨까지 잃은 것이다.

광주 교통질서의 심각성은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광주는 지난해 자동차 1만대당 사고건수가 156.4 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105.4건)의 1.5배 수준으로, 충남(77.8건)에 비해선 두 배 이상 높다.

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68.8건으로, 전국 평균(444건)보다 28%나 높았다. 또 같은 수치는 서울과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어서 교통사고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다.

김양균 변호사는 “광주 교통문화의 후퇴는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재와 취약한 교통인프라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시민들 모두가 낮시간대 전조등 켜기와 방향지시등 켜기, 교차로 신호준수, 무단횡단 금지, 먼저 양보하기 등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난해 광주에서는 총 8천231건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광주일보 공동 캠페인



여·야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더기 해고 사태가 예고된 1일 광주시 북구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령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고 속출

광주·전남 비정규직 계약 해지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비정규직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막판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일 “계약 만료된 비정규직 6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행정 보조 인력 등으로 근무해온 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계약 해지 방식으로 해고한 것이다.

국가보훈처 산하 광주보훈병원도 계약 만료 비정규직 2명에게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도 몇까지 고용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10여명의 계약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광주시 A업체도 계약 만료된 130여명의 비정규직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해지도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런 해고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노동청 등 지역 노동당국이 과학한 결과 최소 1천여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연말까지

계약 만료되거나 때문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의 경우 광주시내 100인 이상 사업장 1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2년간의 고용 기간을 채운 비정규직 892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조사해 80.9%인 722명에 대한 재고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지난 5월까지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도 461명에 달했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30인 이상 사업장 71곳을 조사해 연말까지 184명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청 목포지청도 50인 이상 사업장 43개소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140여 명 해고가 예상된다며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비정규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本社人事

▲丁在炫 논설실장

▲金載烈 논설위원

▲奇賢鎬 독자서비스국장

<7월 1일자>

알림

‘테마칼럼’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금요 인기칼럼 ‘테마칼럼’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경제, 문화, 글로벌, 정보 등 4개 테마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안톤 솔츠 교수와 이상길 원장의 칼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이승우 소설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서울신학대학 졸업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대산문화학상, 동서문화학상, 현대문화상 수상 ▲저서 ‘식물들의 사생활’ ‘생의 이면’ ‘미궁에 대한 추측’ 등 다수

◇이상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MBC프로덕션 민화영화팀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창작지원센터장 ▲베네스인베스트먼트 콘텐츠 투자본부장 ▲TV용 애니메이션 ‘귀여운 쪼꼬미’ 기획·제작

◇송기진 광주운행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빛은행 구로본동 지점장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광주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운영위원 역임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이사 역임 ▲동탑산업훈장 수여

광주일보

與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기습상정하고, 이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국회가 과국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위원 등 같은 당 소속 위원 8명은 민주당 주미애 위원장과 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날 상정은 비정규직 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과파며 원천 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이날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정문제와 관련, 교섭단체의 원내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예약문 02-228-4711-2
예약문 02-228-4711-2

